

네덜란드-독일 역사 청산

-전후 독일 처리문제에 대한 네덜란드의 태도 변화를 중심으로*

고주현**

〈국문초록〉

네덜란드 정부는 독일과의 전쟁보상에 관한 협의과정에서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보여 왔고 다른 주변국들과 비교했을 때 보상의 범위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오랜 기간 중립노선을 지켜왔던 네덜란드는 독일의 침공으로 전 산업부문에 걸쳐 참담한 피해를 입었다. 네덜란드에서 유대인 학살 비율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피해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의 독일에 대한 전쟁 배상 요구가 온건한 기조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과정과 역사적 국면들에 주목하였다. 네덜란드와 독일, 양 지역 간 전후배상에 관한 과정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설립 및 참여와 함께 일부 설명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변국가들의 전후 피해보상에 대한 강경한 입장과 대비되는 네덜란드의 온건 기조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유럽공동체를 통한 경제회복이라는 기능주의적이고 결과론적인 측면을 넘어, 네덜란드 정부가 2차 대전과 전후 전쟁 보상을 위한 협상의 여러 국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왔는지, 협상 과정에서 가장 우선이 되었던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시기별 태도의 변화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지 등에 관한 분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16-S1A5-A2A03926153)이며, 2017년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된 ‘유럽의 역사화해와 지역협력’ 과제(2017 한일-지정주제-2)의 일부를 수정 발전시켰음을 밝힌다.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석을 실시했다. 나아가 최종적으로 온건 기조가 형성될 수 있었던 구조적 요인(사회경제적 측면)과 행위자적 요인(정치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네덜란드는 전후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전후 배상을 포함한 독일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2차 대전 직전까지 독일은 네덜란드의 가장 큰 무역파트너였으며 상호 경제의존의 수준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하지만 종전 직후 연합국의 독일분할점령정책은 네덜란드와 독일의 무역관계 개선에 장애로 작용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한 상업적 고려가 다른 정치적 고려들보다 우선 되어졌고, 연합국의 정책방향이 명확해진 후에야 네덜란드의 대독일 처리문제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다. 결국 전후 독일 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은 온건한 입장을 고수하던 정치인들과 산업계의 경제적 입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렴되어졌다.

주제어: 네덜란드-독일 역사청산, 전후 네덜란드-독일 영토병합, 전후배상과 합의, 네덜란드-독일 경제의존, 상호의존과 합의정치

차 례

- | | |
|---------------------------------------|-----------------------------|
| I. 서론 | IV. 네덜란드-독일 간 경제적 관계와 상호 의존 |
| II. 네덜란드-독일 간 전후 처리 및 청산에 관한 역사적 전개과정 | V. 결론 |
| III. 전후 독일 처리 문제에 관한 시기별 · 쟁점별 분석 | |

I. 서론

네덜란드와 독일 간 전쟁 피해보상을 통한 역사청산은 비교적 온건한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네덜란드 정부는 독일과의 전쟁보상에 관한 협의과정에서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보여왔고 다른 주변국들과 비교했을 때 보상의 범위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오랜 기간 중립노선을 지켜왔던 네덜란드는 독일의 예상치 못한 침공으로 2차 대전에 참전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네덜란드의 성장을 견인해왔던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 항구는

폐쇄되었고 농경지는 파괴되었으며 전 산업부문에 걸친 경제적 피해는 참담한 수준이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 유대인 학살 비율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전체 인구대비 전쟁으로 사망한 인구의 비율은 영국이나 프랑스, 벨기에보다 높았다. 영내 유대인들이 처참한 탄압을 겪은 국가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였다.¹⁾

이와 같은 피해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의 독일에 대한 전쟁 배상 요구는 어떻게 온건할 수 있었는가? 네덜란드에서 전후 경제회복과 복구의 과정이 유럽공동체 형성이라는 다자적 틀 내에서 이루어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 네덜란드 정부는 경제적 통합과 협력에 대해서는 관대했지만 초국가적 정치체 형성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서독을 포함한 유럽의 통합으로 잠재적 전쟁위협을 막고 서독의 경제적 잠재력을 통한 이득을 고려했던 것이다. 따라서 네덜란드와 독일, 양 지역 간 전후배상에 관한 과정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설립 및 참여와 함께 접근되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변국가들의 전후 피해보상에 대한 강경한 입장과 대비되는 네덜란드의 온건 기조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²⁾ 이 점에 주목하여 이 글은 유럽공동체를 통한 경제회복이라는 기능주의적이고 결과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보다 심도 있는 내용적 측면에서 네덜란드 정부가 2차 대전과 전후 전쟁 보상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왔는

- 1) 독일 태생의 유대인 철학사상가 한나 아렌트에 의하면 당시 네덜란드에 거주하던 유대인 인구 중 약 75%가 살해당하는 등 2차 세계대전 중 네덜란드의 유대인은 다른 나라 유대인보다 훨씬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M.P. Leffler, "The Cold War: What Do 'We Now Know'", *American Historical Review* 104, No. 2 (1999) pp.501-524.
- 2) 네덜란드와 독일 간 전후보상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네덜란드 외교사 측면에서 일부 다루어져왔다. 따라서 전쟁의 피해와 독일과의 외교관계 변화의 측면에 집중해 왔다. J. Barendregt, *The Dutch Money Page. The monetary consequences of German occupation and their redress after liberation, 1940-1952* (Amsterdam, 1993); R.T. Griffiths, *Economic reconstruction in the Netherlands and its international consequences, May 1945-March 1951* (Florence, 1984); R.T. Griffiths, *The Netherlands and the integration of Europe 1945-1957* (Amsterdam, 1990). 그러나 국내연구의 대부분은 유럽공동체의 전신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설립배경과 참여에 대한 동인분석을 위주로 하며, 양 지역 간 전후배상의 과정과 주요 정책행위자의 태도의 측면을 면밀히 추적한 국내연구는 거의 없다.

지, 협상 과정에서 가장 우선이 되었던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시기별 태도의 변화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지 등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능주의적 설명이 갖는 물역사성을 보완하고 전후 보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주요 국면들이 다음 국면을 이끌어내는 측면들을 강조하고자 한다. 나아가 최종적으로 온건 기조가 형성될 수 있었던 구조적 요인(사회경제적 측면)과 행위자적 요인(정치적 측면)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겠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전쟁의 초중반, 네덜란드 망명정부가 전통적 무역파트너로서의 독일을 강조하던 시기(1942-43)와 전쟁말까지 대기근이라는 악재 속에 독일의 위협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1944-45), 이어 전후 네덜란드가 종전 처리문제에 관한 최종 공식문서를 연합국 점령위원회에 보낸 후 미국 등 연합국의 독일에 대한 정책방향이 선화된 1948년과 마샬플랜과 독일경제자유화가 시작된 1949년까지 네덜란드와 연합국 정부 관료들의 연설문을 포함한 공식문서들과 전쟁 보상에 관한 입장을 다룬 언론 보도 내용들을 위주로 살펴볼 것이다.

II. 네덜란드-독일 간 전후 처리 및 청산에 관한 역사적 전개과정

네덜란드는 전후 독일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우선으로 서독의 재건을 통해 네덜란드의 수출입 시장을 재확보하려는 온건 전략이었고, 다른 하나는 전쟁 피해 복구를 위해 독일 영토 병합과 구체적인 피해 물자 배상을 주장하는 보다 강경한 입장이었다.

전후 보상에 관한 네덜란드의 요구는 시기별로 변화를 겪었다. 2차 대전이 발발하고 런던 망명길에 오른 네덜란드 정부의 관료 대부분은 독일의 점령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종결되고 나면 독일의 빠른 회복이 필요하다는 뜻을 같이했다. 망명 정부와 기업들뿐만 아니라 점령된 네덜란드에 잠복해

있던 언론들까지도 제3제국이 패망하고 나면 독일 처리에 관해 관대한 입장을 취할 것을 지지했다. 이와 같은 입장은 독일의 범죄에 대한 무조건적 용서나 독일인에 대한 호의와는 별개의 것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의 산물이었다. 전후 독일의 빠른 경제회복 없이는 네덜란드의 경제 복구도 불가능해 보였다. 따라서 독일에 대해 1차 대전 이후와 같은 심한 처벌을 가하지 말고 유럽에서 다시 정상화된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었다.

네덜란드 정부의 온건했던 전후 보상에 관한 입장은 독일과의 특수한 경제 관계에 기인한다. 2차 대전 발발 이전까지 양국의 경제 의존도는 다른 주변국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았다.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42년까지만 해도 네덜란드 망명 정부 관료 대부분은 경제 파트너로서 독일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했다. 전전 1938년까지만 해도 네덜란드의 대독일 수출은 전체 수출의 1/4을 차지했고 이는 독일 전체 수입량의 15%에 해당했다. 네덜란드는 주요 항만과 라인강을 통해 루르지역의 산업화를 촉진할 물자들을 독일에 공급했다. 예컨대 로테르담 항구를 통과하는 물자의 80%가 독일로부터 들어오거나 혹은 독일로 향했다. 네덜란드 농산품의 1/3은 독일로 수출되었다. 또한 독일로부터 주요 광물과 자원을 수입했으며 이는 네덜란드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요소들이었다.³⁾

이렇게 독일의 신속한 경제회복을 통한 재건을 지지하던 온건한 방향으로의 네덜란드의 대 독일 처리문제는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모호성을 띄게 된다. 1944년 패전의 기운이 강해지자 독일정부는 로테르담과 암스테르담의 항구를 고의적으로 철거하고 도시 침수를 단행했다. 이어진 2년여의 기간 동안 네덜란드는 Hungerwinter로 기록되는 역사상 최악의 기근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전후 독일에 대한 망명정부의 의견이 냉혹해지기 시작했다. 전쟁 종결 직전에 펼쳐진 극적인 상황들은 네덜란드인들로 하여금 정의와 보복의 열망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편에서는 대다수의 관료들이 양국 간 유대가 네덜란드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여겼다.

이에 대한 이유는 단순했다. 독일은 19세기 말부터 네덜란드의 가장 중요

3) A.O. Hirschman, *National power and the structure of foreign trade* (Berkeley, 1945), p.89.

한 무역 상대국이었다. 독일은 네덜란드에 공업 물자, 석탄 및 기계류를 제공해주었다. 1930년대에 독일은 네덜란드 수출의 25%를 차지했고 수입은 네덜란드 경제에 26.9%를 차지했다. 2차 대전 이전 네덜란드 수출의 30%는 독일로 향했는데 대부분은 농산품이었다.⁴⁾ 무엇보다도 네덜란드는 독일에 용역을 제공했다. 로테르담 항구와 라인강은 루르 지역과 같은 독일의 주요 공업 지역에 운송로 역할을 담당해왔다.⁵⁾ 네덜란드 경제에 있어 독일의 중요성이 많은 네덜란드 정치인과 기업가들로 하여금 독일의 회복이 네덜란드의 경제복구와 직결된다고 판단하게끔 했다. 그러나 1945년 5월 당시 다수의 네덜란드 시민들에게 이와 같은 판단을 공론화하는 것을 무리가 있었다. 이 시기에 독일과의 무역 재개를 제안하는 것은 정치적 자살과 같은 것이었다.

네덜란드-독일 경제관계의 회복에 있어 더욱 큰 장애는 1945년의 국제정세였다. 독일은 연합국에 의해 4개 지역으로 분할 관리되어졌다. 이 지역들은 빈곤과 기아, 난민과 지뢰가 넘쳐났고 경제체제의 부재로 금융시장도 혼란 상태였다. 제3제국의 패망으로 독일인들의 고통은 가중되었는데, 예컨대 연합국 각각의 통치지역은 자급자족 원칙에 따라 서로 격리되었고 독일 내부 지역 간의 무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의 무역 또한 제한되었다. 나치당의 멸망 이후 독일의 경제적 낙후는 유럽 전체의 전후 회복에 큰 문제를 안겨주었다. 유럽대륙은 독일의 기계, 부품 및 공산품이 필요했지만 2차 대전 이후 모든 무역은 일시적으로 불가능했다. 또한 독일은 한 때 유럽의 식료품과 원자재의 큰 소비국이었다. 독일의 회복 없이는 다른 유럽 국가들 특히 네덜란드와 같은 작은 개방형 경제들의 회복은 불가능했다.

더 큰 문제는 전쟁 종결 후 수년 동안 네덜란드의 내각이 독일을 향한 통일된 정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독일을 처벌할지, 또는 신속한 경제관계 정상화를 모색해야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이 모호함은 1948년 미국

4) G.W. Groeneveld, "De economische en financiële betrekkingen tussen Nederland en Duitsland, Maandschrift Economie. Tijdschrift voor algemeen economische," *bedrijfs-economische en sociale vraagstukken* 12 (1947-48) pp.449-469.

5) F. Wielenga, "Streep onder het verleden? Den Haag, Bonn en de 'Generalbereinigung' van 1960/63", in F. Wielenga (ed.), *De Duitse bruin: Visies uit Nederland, België en Denemarken 1945-1995* (The Hague, 1996) pp.42-69.

이 독일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선회하며 사라지게 된다.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 경제 발전을 위해 독일과의 유대관계 개선을 선택했다. 네덜란드는 유럽 통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로의 가입에 대해 서독을 지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국관계 회복에 있어서 네덜란드의 일부 정치인들은 여전히 유보적이었다.

1948년까지 영국과 미국은 네덜란드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독일 간 경제협력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미국과 영국 정부들은 각각의 통치지역이 자급자족하기를 원했고 그로 인해 독일과의 무역 관계 개선이 절실했던 유럽국가들에 장애가 되었다. 두 통치 지역이 합병되었을 때 네덜란드 정부는 네덜란드-독일 간 경제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이는 허상이었다. 점령군은 네덜란드 상품의 수입에 큰 관심이 없었다. 이 상품들은 대부분 고급 농산품으로 전후 피폐한 독일에는 이에 대한 수요가 없었다. 전후 수요는 자본재, 투자재, 원재료 및 기본 식료품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네덜란드는 이를 생산하지 않았다. 나아가 연합국은 이와 같은 물자를 구입하기 위해 달러의 지불을 요구했다. 전후 네덜란드는 달러 및 외화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경제회복에 필요한 물자들을 미국, 영국 등으로부터 조달할 수 없었다. 미국과 영국 연합군은 독일인들의 생존을 최저 비용으로 유지하고자 했기에 주변국들로부터의 수입은 최소화하였다. 독일의 모든 경제 활동은 경제 전문가들이 아닌 점령군이 관리했고 전후 수 년간 독일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 화폐문제는 정기적으로 논의되었다. 제3제국이 패망한 후 미국과 영국은 독일 점령지역을 각각 관리했는데 그들 지역들은 엄청난 전쟁 후유증과 정치적 고립을 겪고 있었다. 이들은 자급자족하지 못했고 때문에 대량의 식료품을 해외에서 수입해야했다. 독일은 교환 불가능한 화폐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미국과 영국 정부가 이를 지불해야했다. 이는 자국민의 세금 중 일부였으므로 점령군이 매우 신중하게 소비해야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네덜란드의 수출과 라인강의 무역은 이로 인해 심각한 해를 입었다. 경제 전문가가 아닌 군사집단으로 구성된 점령국 지도자들은 모든 금융거래의 단기결과만 고려했고 독일 경제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했다.

1948년에 들어와 미국의 정책은 선회했다. 독일의 미래에 대한 미국, 영국

과 러시아의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미국의 이해관계 역시 바뀌었다. 미국 정부는 자치 정부의 수립을 통한 서독의 분리를 원했다. 마셜 계획과 1948년의 화폐개혁안은 서독의 경제회복에 크게 기여했다. 이 같은 조치들은 서독의 경제회복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달러화 부족을 해소해주었고 경제회복의 길을 터주었다. 또한 네덜란드 정부가 지지하는 유럽 국가 간의 자유무역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미국이 서독의 경제회복 노선을 택하자 네덜란드는 이에 따라 네덜란드-독일 관계의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었다.

2차 대전 후 5년간 네덜란드는 독일에 대해 여러 모순된 정책을 채택했다. 한편으로는 독일 일부 지역을 합병하고 피해 물품들에 대한 반환과 회복 비용 등을 요구하는 반면, 연합국과 함께 최대한 신속하게 네덜란드-독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 전후 몇 년 간 네덜란드의 정책은 모호했다. 보복을 향한 열정은 경제 회복을 향한 열망과 충돌했다.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는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러한 네덜란드의 역사청산과 대 독일 처리 문제에 대한 모호성은 연합국에 의해 독일의 미래가 확실히 되었을 때에야 보다 명확해질 수 있었다.

네덜란드의 전후 대 독일 문제 처리에 대한 시기별·쟁점별 전개과정은 다음의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III. 전후 독일 처리 문제에 관한 시기별·쟁점별 구분

1. 1942-43 : 전쟁 중반

2차 대전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인 1942-43년 사이에 네덜란드 망명정부와 재건위원회는 독일의 경제재건을 지지하고 유연한 통제를 주장하는 등 온건 노선을 취했다. 망명정부 외교부는 전후 독일 처리 문제에 있어 네덜란드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하는 지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출간했다. 보고서는 독일에 대한 철권정치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독일의 인구와 조직력 등을

감안할 것과 동시에 미래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다. 나아가 안보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모두 고려해야하지만 1차 대전 이후의 독일에 대한 처벌과 같은 강경한 방식은 오히려 국가사회주의를 재발시킬 수 있음을 경고했다.

미래 사민주의 수상이 될 Willem Dress도 네덜란드의 지정학적 위치 상 유럽과 독일의 관문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며 독일과의 무역 관계 중요성을 역설했다. 대다수의 주요 정치인들은 독일의 재건을 통한 양 지역 간 정상적 관계회복을 희망하며 이는 당시 정부관료들의 연설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독일에 의해 점령당한 네덜란드에서 전후 독일 문제를 온건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네덜란드-독일은 19세기 말 이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 왔다. 2차 대전 발발 직전까지 네덜란드 수출의 30%는 독일로 향했고 그 중 대부분은 농산품이었다.⁶⁾

로테르담 항을 이용하는 비중 역시 독일이 80%를 차지했다. 로테르담 항의 발전은 루르지역의 산업화와 직결되었고 따라서 독일 시장은 전후 네덜란드 재건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 그로 인해 적국에 대한 사고의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어느 정도의 온건한 처벌만 하자는 게 당시 대다수의 주장이었다. 강경론자인 Posthumus Meyes는 전후 독일의 잠재적 위협을 경고하는 등 안보 측면의 접근을 해왔지만 한편으론 그마저도 “독일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독일이라는 수출 시장의 퇴보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네덜란드 경제에 불이익을 줄 것이다”고 주장했다. 즉, 경제 파트너로서의 독일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으며 무역시장의 지나친 훼손은 불가함을 명확히 했다. Van Kleffens 외무장관 역시 네덜란드 정부의 온건한 접근에 공감했다.⁷⁾

6) 예컨대 1938년 기준으로 독일의 네덜란드 수출 비중은 4억5천9백만 Reichmark 였는데 영국이 3억7천백만, 프랑스가 2억2천9백만 Reichmark에 해당하는 물품을 네덜란드에 수출했다는 점을 비교해볼 수 있다. H. Daalder and J.H. Gaemers (eds.), W. Drees. *Op de kentering. Toekomstbesonneningen uit bezettingstijd* (Amsterdam, 1996), p.77.

7) F. de Goey, *Ruimte voor industrie. Rotterdam en de vestiging van industrie in de haven 1945-1975* (Rotterdam 1990), pp.124-125; F. de Goey and H. van Driel, "Rotterdam und das Hinterland (1920-1995)," in Klemann and Wielenga, *Deutschland und die Niederlande*, pp.127-151.

만면 일부 정치인들은 전후 독일에 대한 지난 친 의존을 삼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Van den Broek 재무장관은 독일로부터 전쟁 피해 보상을 위해 영토병합과 같은 강경한 주장을 펼쳤지만 이에 대한 호응은 적었다. 이 당시만 해도 연합국들은 독일산업 파괴를 진지하게 논의하였고 Kleffens는 이와 같은 강경한 독일 처리 방식에 반대했다. 독일을 농업국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의 모겐소 플랜도 네덜란드 망명정부는 거부했다. 독일의 농경화는 네덜란드 농산품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1943년 4월 연합국에 철 등의 공동관리를 제안한 Kleffens의 계획은 거부당했다.⁸⁾ 그는 독일에 대한 지나친 처벌은 국가사회주의를 재출현시키는 정치적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것과 독일인의 야심과 공격성은 단시간에 변하지 않을 것을 경고했다. 런던 망명 정부 관료들도 대체로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⁹⁾

이와 같이 여러 다른 이해관계들이 상존했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경제적 고려로 수렴되었다. 공산당을 제외한 여러 정파의 언론지들도 Kleffens의 입장을 공유했다. 점령 네덜란드에서 불법 언론지를 통해 그의 의견과 주장이 크게 유포됐다. 좌익 프로테스탄트, 자유 네덜란드, 사민, 보수-자유, 켈빈주의 등 이념을 막론하고 대다수 정파에서 유사한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그들은 독일의 유럽 내 위상회복과 지나친 처벌 금지를 주장했다.

8) F. Wielenga, *West-Duitsland: partner uit noodzaak. Nederland en de Bondsrepubliek 1949-1955* (Utrecht, 1989), p.226; Also H. Lademacher, "Die Niederlande und Deutschland 1945-1949: Wirtschaftsfragen und territoriale Korrekturen", in W. Ehbrecht and H. Schilling, *Niederlande und Nordwestdeutschland. Studien zur Regional- und Stadtgeschichte Nordwestkontinentaluropas im Mittelalter und in der Neuzeit*(Cologne/Vienna, 1983) pp. 456-511.

9) S.I.P. van Campen, *The Quest for security. Some aspects of Netherlands foreign policy, 1945-1950* (The Hague, 1958), p.27; NA, BuZa, *Londens Archief*, 2.05.80, inv. nr. 2660; *Lezing W. Chr. Posthumus Meyers*, 26 October 1942.

<표 1> 전후 독일 처리문제에 대한 네덜란드 주요 관료들의 주장: 1942-43

	직책/정파	태도	쟁점 및 주장
Van Kleffens	외무장관	온건	경제적 이해관계 우선/ 통합기구 설립을 통한 통제/ 독일 분할 점령 반대/
Gerbrandy	수상	온건	루르지역 봉쇄 반대
Van der Broek	재무장관	강경	영토 병합을 통한 피해 보상 루르지역의 분리
Van Mook	식민지역 장관	온건	루르지역 봉쇄 가능성 고려
J.T. Furstner	해양부 장관	온건	
Posthumus Meyes	외교관*	강경-> 온건	안보적 측면 강조/ 독일 수출시장의 중요성 또한 고려
William Dress	사민주의	온건	독일과의 무역 관계 중요성
J.G. de Beus	국가 재건위원회	온건	철권정치의 위험성 강조
J.W. Albarda	교통부장관/사민	온건	경제적 중요성/재건위원회의 입장을 자본주의적 자유주의 시각이라 비판
J. van den Tempel	고용·사회서비스 장관/사민	온건	

* Commissioner for Economic Interest in Germany

2) 1944-45 : 대기근(Hungerwinter)

전쟁이 마무리되어가던 1944년부터 45년까지 네덜란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이 시기 네덜란드는 역사상 전례 없는 대기근(Hungerwinter)을 경험했고 동시에 독일군들로부터 네덜란드 일부 영토에 대한 침수 위협을 받게된다. 이 시기 2만명의 네덜란드인들이 아사하는 등 최악의 피해를 입었다. 독일군들이 네덜란드 땅을 침수시킬 것이란 소문과 함께 온건주의자였던 Kleffens는 전후 영토 병합의 극단적인 위협을 가해서라도 이를 막을 것이라 주장하며 독일문제에 관한 태도에 변화를 보여 준다.¹⁰⁾ 독일 점령군은 결국 네덜란드

10) E.N. van Kleffens, "If the Nazis Flood Holland", *Foreign Affairs* 22(May, 1944), pp.543-551.

서부지역에 대한 침수를 감행했고 이로 인해 경작지의 상당부분이 피해를 입었다.¹¹⁾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기존에 독일 처리문제에 있어 온건한 입장을 고수하던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전후 배상과 영토 합병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 독일 처리 문제에 대해 온건한 입장이던 외무장관 Kleffens의 태도 변화에 주목해야한다. 그는 독일의 만행에 대해 군사적 시각에서의 대응을 문의했다. 하지만 이 때까지도 그는 영토 병합 문제를 대중에 표명하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944년 5월에는 미국 Foreign Affairs 기고를 통해 전후보상을 물자로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¹²⁾ 즉 이 때까지는 국내외적으로 영토병합을 공론화하지는 않았다. 네덜란드 정부는 1944년 10월 처음으로 전후 독일 영토 병합을 통한 보상요구를 고려함을 연합국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공식문서를 통해 영토 병합문제를 공식화하지는 않았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독일 처리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책 노선을 밝히는 것은 시기상조라 판단한 것이다. 그는 이어 라디오 방송(Radio Oranje)을 통해 독일 영토병합은 없을 것이라 명백히 했다.¹³⁾

이 시기 주목할 점은 1944-45년 Hungerwinter를 거치면서 기존에 “경제적 고려”가 우선이었던 대독일 처리문제에 관한 쟁점이 “복수와 보상, 영토 병합”으로 확대되어 갔다는 것이다. 독일의 점령기간 동안 네덜란드 희생자는

11) 1944년 3월 Wehrmacht로 20만 헥타르 규모의 8.5% 경작지였고 그 외 Utrecht, North Brabant, Zeeland 지역으로 Zeeland의 경우 종전 후 1953년까지도 경작을 할 수 없는 불모지가 되었다. 이로 인한 네덜란드 희생자 규모는 30만명에 달했고 Limburg, Brabant를 포함한 남부지역 산업시설도 크게 훼손됐다. 생산설비, 노동생산성, 금보유량과 해외투자가 감소하는 등 총피해액은 약 260억 길더에 달했다. 그 외 항구, 철도, 다리 등 운송, 교통시설 역시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네덜란드 전역에 설치되어있던 26개 철교 중 3개만 남았고 59개 다리 중 무사한 다리는 9개뿐이었다.

12) E.N. van, Kleffens, "If the Nazis Flood Holland", *Foreign Affairs* 22 (May, 1944), pp. 543-551.

13) A.E. Kersten, "Mr. E.N. van Kleffens, minister van Buitenlandse Zaken 1939-1946", in B. van der Zwan, A. Kersten en T. van Zeeland (eds.), *Het Londens Archief: Het Ministerie van Buitenlandse Zaken tijdens de Tweede Wereldoorlog* (Amersfoort/Moerkapelle 2003), pp. 29-35; <http://www.inghist.nl/Onderzoek/Projecten/BWN/lemmata/bwn3/kleffens> (검색일자: 2017. 5. 25.)

인구 천만명 중 30만명에 달했으며 특히 피해가 심했던 곳은 남부 Limburg와 Brabant 지역이었다.¹⁴⁾

전쟁 기간 동안 네덜란드의 피해액은 인프라와 생산 장비 손실로 77억 길더(GNP의 2배에 해당), 42억5천만 길더에 달하는 노동생산성 감소, 금보유량과 해외투자 감소로 28억 길더에 해당했다. 여기에 해방 후 산업생산성 감소로 인한 피해액까지 더하면 총 260억 길더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이는 1938년 기준 네덜란드 총 자산 287억 길더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규모라 할 수 있다. 특히 독일과의 교역량이 많았던 항구의 피해가 컸다. 이 시기 네덜란드의 부채 규모는 증가하고 화폐 유동성이 커지면서 큰 인플레이를 경험하게 된다. 국가 재건 비용 증가와 인도네시아에서의 전쟁으로 공공비용은 상승했고 세수는 감소했으며 국가 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안보와 경제적 이슈 등 정책 우선 순위가 불명확해지는 시기를 겪게 된다.

<표 2> 전후 독일 처리문제에 대한 네덜란드 주요 관료들의 주장: 1944-45

	직책/정파	태도	쟁점 및 주장
Van Kleffens	외무장관	온건-> 강경	피해 정도에 따라 영토 병합 고려/ 경제적 이해관계
Van Verduynen	외교관/ 보수·카톨릭	온건-> 강경	독일의 야만적 행동에 대한 응징으로 영토 병합 고려
Dutch Reconstruction Committee	독일재건위원회	온건-> 강경	영토 병합 고려/ 독일 분리 반대
Van Sas	참모본부장	강경	피해 보상을 위해 영토 병합 찬성

14) 네덜란드 피해규모가 과장되어졌다는 주장이 일부 역사가들에 의해 최근 제기되어지기도 했다. 그들에 의하면 네덜란드 남부지역은 1944년 9월 이미 해방되었고 산업시설 역시 모두 가동 중이었으며 또한 산업시설의 피해가 실제로는 보다 적었는데, 독일 점령군에 의해 시설 자체가 아닌 생산품을 약탈당했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실제로 네덜란드는 1920년대 말 이후 처음으로 2차대전 발발 후 초기 2년간 경제성장을 경험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어졌다. 나아가 1938년 수준 대비 1945년 네덜란드 GDP는 전후 네덜란드 통계청이 제시한 52%가 아닌 86%였다는 주장도 있다. 전간기에는 독일의 생산주문 요청으로 투자도 상당부분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E.N. van Kleffens, *Belangen II 1940-1958* (Alphen aan den Rijn, 1983), p.117.

Posthumus Meyes	외교관	강경	독일이 전쟁 막바지에 네덜란드를 이류 국가로 만들어 지속적으로 독일에 의존하게끔 하려한다는 주장
--------------------	-----	----	---

3) 1945-49 : 해방 이후

패망 후 독일은 4개 연합국에 의해 분할 점령당했다. 연합국의 의도는 독일을 작게 나누어 힘을 분산시키려는 것이었고 이는 주변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었다. 연합국들의 일관되지 못한 점령 지역 관리 정책은 독일과 무역을 재개해야만 하는 네덜란드에 난관으로 작용했다.

포츠담 협정을 통해 점령 독일에 대한 최고 통치기구인 연합통제이사회(Allied Control Council, ACC)가 설립되었지만 모든 의사결정이 만장일치제로 이루어져야하는 상황에서 한 개 지역이라도 반대하면 부결되는 상황이 많은 경우 발생했다. 이로 인해 ACC는 특히 배상 문제에 대한 참여국들간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¹⁵⁾

네덜란드 재무장관인 Liefstinck는 독일과의 관계 개선이 절실함을 이유로 영토 병합 대신 독일 노르트 라인 베스트팔렌주와 경제 문제 협상 준비가 되어있음을 연합국에 알렸다. 네덜란드는 1945년 파리회의를 통해 보상액으로 250억 길더를 ACC에 요구했다.¹⁶⁾ 또한 가능한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상품을 배상하도록 요구했다.¹⁷⁾ 하지만 최종 결정은 각 분할 점령지역의 사령관의 권한 하에 있었다. 1946년 1월 미국,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룩셈부르크와 유고슬라비아가 참석한 가운데 파리에서 합의문이 서명되었지만 네덜란드의 요구조건은 채택되지 않았다.

15) S.I.P. van Campen, *The Quest for security: Some aspects of Netherlands foreign policy 1945-1950* (The Hague, 1958), p. 27.

16) Ibid., pp.28-29.

17) K.C. Lammers, "Introduction: The Nordic Countries and the German Question after 1945", *Contemporary European History* 15 (2006), pp.443-452 and ibid., "Living Next Door to Germany: Denmark and the German Problem", *Contemporary European History* 15 (2006), pp.453-472; A.M. LeCloannec, "France, Germany, and the New Europe", in D. Verheyen and C. So, *The Germans and Their Neighbors* (Oxford, 1993), pp.13-34; J. Fitzmaurice, "Belgium and Germany: An Enigmatic Relationship", in Verheyen and So (eds.), *The Germans and Their Neighbors* (Oxford, 1993), pp.83-104.

1945년 4월 재독일 네덜란드경제이해사무소가 설치되었고 네덜란드의 피해규모를 ACC에 지속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맡았다. 사무소 활동을 마치던 1949년 7월까지 2억 길더에 해당하는 상품과 금이 네덜란드로 돌아왔다. 사실 독일의 약탈 물자는 현금을 제외하더라도 약 45억 길더(16억8천5백 달러, 1달러=2.67길더)에 달했다. 따라서 최종배상금액은 250억 길더의 배상을 요구했던 네덜란드의 기대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었지만 이는 네덜란드의 배상액에 대한 요구가 불명확했던 것이 아니라 연합국이 독일의 철저한 파산을 원치 않았기 때문으로 봐야한다. 1945년 10월 네덜란드는 독일 공장의 해체 계획에 반대했다. 연합국은 독일산업의 파괴를 고려 중이었는데 이는 네덜란드의 이해와 상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쟁 직후 독일에 대한 대중들의 증오와 원망이 높았기에 정치인들은 독일 처리 문제와 정책방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명확히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1946년의 조사에 따르면 네덜란드 일반 대중의 80%가 독일영토에 대한 병합에 찬성의사를 밝히며 정부의 경제우선 정책방향과는 차이를 보였다.¹⁸⁾

1947년 초 로테르담 상공회의소장인 W.F. Lichtenauer는 “독일에서 전부를 뺏어오게 되면 독일의 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이는 네덜란드의 최우선 이해에 반하는 것”임을 주장했다. 농무부도 문서를 통해 “독일은 중요한 무역파트너이며 특히 농산물 수출의 주요 대상 지역임”을 표명했다.¹⁹⁾ 1946년 Kleffens는 연합국에 네덜란드의 영토보상 요청을 서두를수록 배상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국경선의 40km에 해당하는 독일 영토 1만 평방 킬로미터(백만명의 독일인이 거주하는 네덜란드 영토의 1/3에 해당하는 지역)를 연합국측에 요구하고자 했다. 그러나 영토병합을 통한 다수의 부정적 영향이 지적되었다. 거주민과 같은 지역민 처리문제와 함께 그 지역이 이미 전

18) G. Mai, "The United States in the Allied Control Council. From Dualism to Temporary Division", in D. Junker (ed.),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in the Era of the Cold War, 1945-1990. A Handbook. Volume I: 1945-1968* (Cambridge/Washington, 2004), pp.50-56.

19) W.F. Lichtenauer, 'De havens in het Deltagebied van de Rijn', in W.F. van Gunsteren and T. Lighthart, *Fysisch- en Economisch-Geografische Beschouwingen over de Rijn als Europese rivier* (Rotterdam, 1948), pp. 303-334.

쟁으로 철저히 폐허가 된 지역이라는 점, 따라서 영토 재건을 위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 등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독일 영토 병합을 통해 네덜란드에 실제로 돌아오는 이익에 대한 논란이 증가했고 경제적 부담에 대한 반대 의견이 팽배해졌다. 영토병합으로 네덜란드가 얻게 되는 양적, 질적인 이익이 미비하다는 점에 다수의 의견이 모아졌다. 경제주간지 ESB(Economisch-Statistische Berichten)에 의하면 네덜란드 국가소득 하락, 국가부채 증가와 더불어 해외부채와 신규투자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나아가 이는 독일 재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자명했다.²⁰⁾

영토 병합 실패와 관련해서는 독일회복 문제와 더불어 국제개발 이슈도 주요역할을 했다. 1946년 네덜란드 정부의 요청으로 사민당 당수 J.J. Vorrink가 조사한 영토 수정 가능성 보고서에 의하면 “영토 병합으로 경제적 혼란은 가중되고, 연합국이 영토 병합을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결론내렸다.²¹⁾ 파리 주재 네덜란드 대사이자 동인도 총사령관이었던 A.L.Tjarda van Starckenborgh Stachouwer 역시 “영토병합은 독일 재건에 부정적일 것이며 독일 회복을 위해 서독을 서유럽에 통합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병합을 철저히 반대해왔던 신임 수상인 L.J.M. Beel과 C.G.W.H. van Boetzelaer 외무 장관도 공감의 뜻을 밝혔다. 당시 미국무 장관이던 James F. Byrnes은 1946년 9월 6일자 연설을 통해 자르 Saar문제를 제외한 어떤 영토이전에도 동의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주요 정치인들의 이와 같은 공감대는 Beel 내각에 영향을 주었고, 결국 Vorrink의 제안을 채택, 영토 병합 요구를 축소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Van Boetzelaer는 독일의 미래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이 증대하고 있음을 간파했다. 그는 양국의 갈등으로 서독이 분리될 경우 네덜란드와 긴밀한 무역파트너 관계를 회복해야함을 주장했으며 이로 인해 영토병합문제는 수정됐다.

1946년 11월에는 독일 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정부도 영토병합을 비

20) Economisch-Statistische Berichten (ESB), ‘Herstellplan en herstellbetalingen’, 28 January 1948, pp.64-67; H.A. Schaper, ‘Wij willen zelfs niet Möchen-Gladbach!’. De annexatiekwesitie 1945-1949’, *Internationale Spectator* 39 (1985), pp. 261-272.

21) HStAD, NW 397-197. *Staatskanzlei*; L. Martijn, (2011) p.56.

판하기에 이른다.²²⁾ 나아가 네덜란드 산업, 농업, 무역과 재무 분야 기업들도 독일과의 경제 관계 재구축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네덜란드 정부와 산업계는 양 지역 간 무역관계를 회복시키는데 협력했다. Royal Dutch Shell, Unilever, Philips, AKU와 같은 주요 네덜란드 기업들은 전쟁 당시 네덜란드 재건위원회에 참여하며 전후 처리문제에 관해 망명정부에 여러 자문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들의 정부에 대한 로비 영향력은 네덜란드 정부가 전후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려고 노력했던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그들이 전쟁 전 독일에 투자했던 부문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 시 독일이 불법적으로 가져간 네덜란드 자금을 환수하는 것을 포기하기도 했다. Liefstinck 재무장관은 영토병합을 포기할 것을 제안했고 이와 같은 이유들로 영토배상 요구는 1750평방 킬로로 축소되었다. 네덜란드는 이 요구사항이 명시된 Memorandum을 1946년 연합국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은 네덜란드의 영토합병 요청을 강경히 반대했다. 네덜란드의 영토요청지역은 영국점령지역으로 연간 석탄 생산량이 백만톤에 이르고 채굴비용은 950만 길더가 소요됐다. 이는 영국에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이었다. 게다가 네덜란드는 독일 국경선을 포함한 영토 수정과 독일로부터의 광산 양도뿐만 아니라 독일의 재건을 통한 독일과의 무역 정상화와 독일로의 상품 수출의 교두보로 네덜란드 항구의 이용을 요청하는 등 이중적인 주장을 함으로써 전후 대 독일 정책에 대한 모호성을 보여왔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미국이 네덜란드의 이와 같은 요청에 반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네덜란드의 요구사항들이 서독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의 연합국 외무장관들이 모인 1947년 3-4월 모스크바 회의를 통해 미국은 서부 점령지역이 더 이상 파괴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미국로서는 서독의 재건과 유럽경제의 회복이 가장 우선적인 이익이란 것이 보다 명확해졌다.

1947년 2월 초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77%의 네덜란드인들이 독일과

22) HStAD, NW 397-202 *Staatskanzlei; Brochure Vereniging van de Industrie en Handellkamers van het Land Northrin-Westfalen, 'De Nederlandse Gebiedseisen', 1 September 1947; ibid., p.55.*

의 무역재개 필요에 공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게다가 1948년 2월 워싱턴이 프랑스, 영국, 미국과 베네룩스 국가들이 참석한 런던회의에서 네덜란드의 요청을 거부할 것이란 것은 자명했다. 이 회의를 통해 네덜란드의 요청 사항은 전혀 실현되어질 수 없음을 확인했다. 미국은 네덜란드의 경제적 요구사항들뿐만 아니라 경제이슈와 영토병합을 함께 요청한 것을 전면 거부했다.

네덜란드가 최종적으로 할당받은 독일 영토는 9200명의 독일인이 거주하는 69km²에 그쳤다.²³⁾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정부와 독일 신문은 이 안을 전면 거부했지만 이는 구속력있는 결정이었다. 1948년 10월 29일, 영국 점령 지역 사령관인 B.H. Robertson은 독일의 여러 주대표들을 대상으로 네덜란드로부터 최종 합의된 할당 영토 이상의 영토 병합요청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전쟁 종료 직후 독일에 대한 네덜란드의 정책은 처벌과 보상에만 집중될 경우 성공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²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정치인들은 독일의 산업시설 파괴에 전혀 찬성할 수 없었지만 영토병합과 관련해서 대중들을 위한 선심 주장을 한 셈이다. 네덜란드는 독일의 경제 재건을 통해 자신들의 수출 이익을 증대하고 기계류의 수입을 가능하게 하며 네덜란드 항구의 활성화를 꾀했다.

나아가 국제관계의 증대가 헤이그로 하여금 온건한 처리 방식을 택하게 했다. 동서 관계가 악화되어감에 따라 런던과 워싱턴은 경제적으로 보다 성장한 서독이 유럽의 일원으로 통합되기를 희망했다. 1946년 말, 영국과 미국은 그들의 독일 점령지역이 더 이상 쇠퇴해지지는 요인들을 불허했다. 독일의 재건은 유럽의 재건을 위해 필수불가결했고, 그에 따라 미국으로서는 서독의 재건이 최우선 목표였기에 네덜란드의 보상 혹은 영토 수정 등의 요청은 무시되었다. 연합국의 정책은 독일에 대한 네덜란드 정책의 처벌적 측면에 영향을 주었지만, 이는 또한 네덜란드-독일 간 경제관계의 신속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23) C. Weisz, H-D. Kreikamp en B. Steger, *Akten zur Vor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45-1949. Band 4: Januar-Dezember 1948* (Munich, 1983), p.910.

24) P.F. Maas (ed.), *Parlementaire geschiedenis van Nederland na 1945, Deel 3. Het kabinet-Drees-Van Schaik. 1948-1951. Band A: Liberalisatie en sociale ordening* (Nijmegen, 1991), p.376.

1948년 7월 파리 회의 이후 헤이그의 대독일 정책은 ‘경제관계의 빠른 회복’에 집중됐다.

<표 3> 전후 독일 처리문제의 전개 과정: 1946-49

	직책/정파	태도	쟁점 및 주장
Schermerhorn-Dress	자유사상민주동맹/ 노동당 연립내각	온건	네덜란드 경제 재건과 네덜란드 인프라 구축/ 동인도 지역 상실로 인해 경제적 파트너로서의 독일 역할 더욱 중요
P. Lief tinck	재무장관	온건	네덜란드의 요구와 보상액에 대한 지나친 기대, 하지 말 것을 경고
G van Bockel	군사대표부 재건부장	온건	전쟁 피해물자 전체를 보상받는 것은 불가능
Van den Broek	(전시)재무장관	강경	영토 병합을 통한 피해 보상
Van Kleffens	(전시)외무장관	온건-> 강경	영토 병합을 논의하는 네덜란드 영토확장 위원회 설립을 승인
D.U. Stikker	신임 외무장관 1948-1952	온건	네덜란드-독일 간 경제관계 강조
C.P. Romme	카톨릭당수	강경	카톨릭 언론(Christofoor)과 함께 독일영토 병합 찬성-> 브라반트 같은 농민다수의 정당지지 기반을 갖는 남부 카톨릭 지역은 농지는 적고 인구는 많아 독일영토와 동인도 지역이 중요

이상에서 살펴본것듯이 네덜란드 주요 정치인과 관료들의 전후 독일 처리문제에 관한 태도와 입장은 시기별 쟁점별로 변화되어갔다. 하지만 네덜란드에서 나치 부역자 처리 문제와 독일에 대한 전후 보상에 관한 전반적인 기조는 다른 나라에 비해 온건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독일 점령 초기 네덜란드인들이 덴마크나 벨기에 등 주변국들과 비교해 독일 측 정책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과 특히 경제분야에 있어서 네덜란드-독일 간 협력과 의존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컸던 점, 전후 피해복구를 위해서는 독일의 재건이 필수적이라는 경제적 고려가 우위에 있었던 점 등을 들 수 있다. 나아가 연합국의 대 독일 처리문제의 모호함으로 인해 독일과의 무역관계 개선이 어려웠고 이후 네덜란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토병합 등의 요구는

연합국의 반대로 무산된 측면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차 대전 직전과 전쟁 종료 후 네덜란드와 독일, 양 지역 간 무역량 변화를 포함한 경제교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IV. 네덜란드-독일 간 경제적 관계와 상호의존

두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긴밀한 경제적 관계와 높은 상호의존성은 양 지역 간 분쟁을 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독일과 네덜란드는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상호 정치적 압력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2차 대전으로 인한 처참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에게 독일은 정치적 압력을 주기에는 그 경제적 중요성이 너무 컸다. 이는 독일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 독일에 대해 패전국으로서 행동해달라는 네덜란드의 지속적인 암시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네덜란드의 행동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서독의 경제가 회복되면서 로테르담 항구를 포함한 네덜란드 내 운송항로가 더욱 중요해지며 양 지역 간 상호 의존은 더욱 커졌다.²⁵⁾

하지만 전쟁 직후의 상황은 달랐다. 당시 네덜란드와 독일 간 무역재개를 방해했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연합국의 독일분할 정책 때문이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영국은 네덜란드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파운드 지불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수출은 달러를 받을 시에만 허용했다. 연합국에 의한 독일 분할은 네덜란드-독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²⁶⁾

25) <http://www.cpb.nl/nl/pub/cpbreeksen/bijzonder/16/bijz16.pfd>. (검색일자: 2017. 5. 25.)

26) 1947년 10월 주 네덜란드 독일 상공회의소장인 Gelissen이 (네덜란드-독일 무역 장벽을 두고) ‘제일 큰 장애 높이뛰기 봉으로도 넘지 못할 벽’이 있다고 한 것은 당시 양 지역 간 무역에 대한 제약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준다. 당시 독일과의 해외무역과 금융거래는 연합국이 설치한 합동 수출-수입기관(JEIA)에 의해 관리되어졌다. 네덜란드는 연합국에 보낸 여러 성명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차관을 얻어 독일과의 무역을 보증하기 위한 시도도 했지만 이는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H. Gelissen, *Bijdrage tot de Wakenphaan der Nederlands-Duitse betrekkingen* (The Hague, 1950); J. Wemelsfelder, *Het herstel van de Duits-Nederlandse economische betrekkingen*

이 시기 네덜란드-독일 간 무역량이 절대적으로 감소했다는 몇 가지 증거들이 있다. 1938년 네덜란드는 3억 길더에 해당하는 상품을 독일로부터 수입했다. 하지만 1946년과 47년 수입량은 각각 1700만과 2500만 길더로 감소했다. 수출도 마찬가지였다. 1937년까지만 해도 네덜란드의 대독일 수출액은 1억5천4백만 길더에 이르렀다. 전 후 2년간 이는 각각 1300만 길더와 1400만 길더로 하락했다. 결과적으로 당시 네덜란드의 수출은 수입 대비 37% 수준에 머물렀고 1938년 74%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인다. 네덜란드의 대독일 수출 규모는 1951년이 되어서야 예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었다.²⁷⁾

<표 4> 네덜란드 총 무역규모(백만 길더), 네덜란드 GDP 대비 국제무역과 독일과의 무역비중, 1938, 1946-57.

연도	총수입	총수출	전년도 대비 변동비율(%)		GDP 대비 국제무역 비중(%)		국제무역 중 독일과의 무역비중(%)	
			수입	수출	총수입	총수출	독일로부터 수입	독일로 수출
1938	1460	1079			27	20	21	15
1946	670	229	-54	-79	21	8	3	6
1947	1109	515	66	125	33	14	2	3
1948	1241	741	11	44	33	18	5	6
1949	1333	1082	7	46	32	23	7	11
1950	1763	1463	32	36	42	29	12	21
1951	1741	1669	-1	14	46	35	12	14
1952	1556	1851	-11	11	38	36	14	14
1953	1805	2045	16	10	38	35	16	14
1954	2235	2293	24	11	41	35	17	16
1955	2508	2553	12	11	41	35	18	17
1956	2831	2646	13	4	44	34	18	18
1957	2949	2789	4	5	45	34	19	19

출처: CBS, Zeventig jaar statistiek in tijdreeksen, 1899-1969(The Hague, 1970); Lak(2011) p.116.

na de Tweede Wereldoorlog (Leiden 1954).

- 27) 1949년 9월에서야 미국 정부가 네덜란드 제품의 독일 수출을 허용했는데 이는 네덜란드-독일 간 무역 정상화를 위한 필수조건이었다. 이로 인해 GDP성장의 8%를 차지할 정도로 네덜란드의 수출규모는 급속도로 증가했다. 이는 마샬플랜으로 네덜란드가 받은 영향의 4배나 되었다. 네덜란드로서는 마샬플랜으로 인한 지원보다 독일과의 무역정상화가 전후 경제회복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Lak(2011), pp.153-155.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전쟁이 끝나고 1946년부터 1949년까지 네덜란드와 독일간의 무역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네덜란드 GDP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후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네덜란드가 전후 회복을 위해 산업 기계와 자본재 수입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수출 또한 다소간의 증가를 보였지만 총 무역 중 독일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감소했다. 여기서 네덜란드는 연합군 정책으로 인한 독일과의 무역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 사실 네덜란드의 독일로부터의 수입은 전후 12년의 기간 동안 전쟁 발발 전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수출은 좀 다른 상황을 보여준다. 1946년 네덜란드의 수출은 1938년 수출량의 21% 수준이었다. 그 후 수년간 꾸준히 성장하여 마샬플랜을 실시하고 독일 시장을 개방한 1949년에 와서야 1938년 수준으로 회복했다. 이어 1950년 네덜란드의 실질 수출은 놀라운 수치를 기록한다. 이는 1949년 9월 독일의 수입 시장 자유화에 기인한다. 이어 1950년 네덜란드의 총 수입이 1938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시장의 개방을 통해서였다. 네덜란드의 수입은 1952년과 53년에 다소 유동적이었지만 1953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1953년과 55년 사이 네덜란드 수출은 20% 이상 증가하였고 1956년과 1957년에는 정상적인 성장의 수준을 이룬다. 이로 인해 네덜란드는 수출주도 성장이 가능해졌다. 1947년부터 1955년까지 실질 수출 증가율은 꾸준히 10%를 상회했고 1950년에는 40% 가까이 되었다. 네덜란드는 수출 증가로 인해 빠른 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

서독의 상황은 1950년 이후에야 나아졌다. 네덜란드 총 수입과 수출에서 서독의 비중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독일 GN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2년과 1957년 사이 14%에서 19%로 증가했다. 1945년까지만 해도 현실성 없어보이던 독일과의 무역 환경은 점차 개선되었다. 무역 파트너로서의 독일을 잃은 네덜란드는 무역 패턴이 일시적으로 달라졌다. 1938년 네덜란드 총 수입의 21%가 독일에서 온 데 반해 1946년과 1948년 사이에는 2.5%에서 5.5%의 수입만이 독일로부터 왔다. 수출도 같은 양상을 띠었는데 1939년 15%를 차지했던 반면, 1946년과 48년 사이 독일은 네덜란드 수출의 6% 정도 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기계, 공구, 운송수단, 철제품 등에 대

한 유럽의 수요는 미국으로 향하게 되었다. 1938년 영국으로 수입된 기계의 44%는 미국, 25%는 독일 제품이었다. 그러나 전후 2년차인 1947년에는 65%가 미국으로부터 수입되었고 독일로부터의 수입량은 3%에 그쳤다.²⁸⁾ 미국이 세계 2차 대전에서 유일한 강국으로 살아남았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유럽의 의존은 당연한 듯 보였다. 미국의 철 생산은 1939년 5300만톤에서 1945년 8천만톤으로 증가했고 이 중 상당수는 폐허가 된 유럽으로 보내졌다. 더 이상 독일로부터 공급되기 어려워진 자본재들은 이제 미국으로부터 올 수 밖에 없었다. 가장 중요한 서유럽 수입국인 영국 역시 미국의 물품 공급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네덜란드 역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수입통계는 이를 명백히 보여준다. 1938년 네덜란드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규모는 1억5400만 길더 정도였다. 반면 1946년과 49년 사이 수입량은 5억3600만에서 11억9800만 길더(1938년 기준으로 1억6300만-3억1000만 길더)까지 증가했고 1947년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네덜란드는 영국으로부터 전쟁 직전 1억1500만 길더 가치의 물품을 수입하였으나 1946년과 47년에 그 수입액은 3억4800-4억6200만 길더(1938년 기준 1억600만-1억2000만 길더)에 달했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전통적 무역파트너인 독일의 연합군 점령지역 간의 무역은 여전히 침체되었다. 연합군은 비싼 네덜란드의 채소들보다 값싼 밀가루 구입을 원했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주요 식료품 수출 시장은 닫혔다. 독일과 라인, 중유럽을 향한 운송길이 막히자 네덜란드 수익원의 가장 큰 부분이 사라졌다. 네덜란드가 독일에 수출한 제품에 대해 연합군은 가치 없는 마르크화(Reichsmark)를 지불했고 독일제품의 수입 역시 쉽지 않았다.²⁹⁾ 연합군은 필수제품은 달러로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그들이 준 필수 제품목록에는 네덜란드가 독일로부터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제품이 포함되어있었지만 채소 등의 전통적인 네덜란드 수출품은 제외되었다. 독일제국 멸망 후 2년간

28) Alan Milward는 서유럽 전체가 전후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철과 자본재는 1938년 이후 무역 증가량의 61%를 차지한 것으로 계산했다.

29) 당시 네덜란드 외교부에서 독일과의 무역담당자가 재무부 장관 Liefinck에게 쓴 편지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상대국은 주지 못했고 원하지 않는 것은 충분히 권했다”고 쓰여 있었다. *ibid.*, p.160.

네덜란드는 서독 지역에 그들의 주요 생산품목이 아닌 제한된 식품만 수출할 수 있었다.³⁰⁾ 1945년 5월 이후 연합국간 독일의 미래에 대한 합의가 어려워지고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수출입시장으로서의 독일의 부재는 네덜란드 경제 재건에 있어 가장 큰 난관이었다. 독일 경제의 회복은 미국을 포함한 연합군의 결정에 달려있었지만 워싱턴은 아직 독일의 재건을 위해 힘을 의지가 없어보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네덜란드는 새로운 수출시장을 찾아야했다. 네덜란드 제품에 관심이 없었던 미국을 제외하고 제일 현실적인 대안은 영국이었다. 영국은 1931년 이후 점차적으로 네덜란드 제품에 대한 수입을 늘려왔지만 양 국가간 무역 관계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네덜란드는 영국이 전시 국제적 지위를 이용해 농산물 수입에 독점적인 가격을 책정했다고 비판했다. 농산물 수입 시장에서 영국의 비중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영국 내 수요 변화는 국제가격을 새롭게 형성했다. 네덜란드 농산품의 주요 시장이었던 독일이 사라지자 대규모 농산물 수입국은 영국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영국으로서는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영연방국들로부터 들어오는 농산품의 수입이 우선일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은 독일의 수입 부재를 이용해 네덜란드로부터 옥류 또한 낮은 가격에 수입하려했기에, 네덜란드로서는 독일과의 무역 관계 회복이 더욱 절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가 미국, 영국 등 연합국과 벌인 협상은 무효화되었고 1948년까지 독일과의 무역은 최저점에 머물렀다.³¹⁾

결과적으로 네덜란드는 기존의 무역파트너였던 독일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고 그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양 지역 간 오랜 기간 유지되어왔던 높은 상호경제의존으로 인해 경제적 이해가 정치적 고려에 우선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³²⁾

30) M. Lak, *The Trust Company and its efforts to reconstruct the bilateral Dutch-German trade, 1945-1949*. Paper presented at the 12th annual congress of the European Business History Association, Bergen, Norway, 22 August 2008

31) 1946년 9월 네덜란드 정부는 미국 점령군에게 무역 신디케이트를 만들어 교역을 진행하는 플랜을 제시했다. 네덜란드는 미국으로부터 1억6000만 달러를 대출받아 독일 원자재를 수입하고자 했다.

V. 결론

네덜란드와 독일은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150여년간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네덜란드 경제에 있어 독일은 필수적이었다. 평균적으로 네덜란드 수출의 1/4 이상은 독일에 의해 소비되었다. 독일에 있어 로테르담 항구를 포함한 네덜란드의 운송항로는 루르 지역의 대규모 물자들을 운송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했다. 네덜란드 농산품의 상당 부분이 독일에 제공되었고 1920년대까지만 해도 네덜란드는 독일 산업에 최대 투자국이었다. 독일은 네덜란드에 석탄과 기계를 제공해주었다. 네덜란드 경제에 있어 독일의 중요성은 많은 정치인들과 기업가들로 하여금 독일의 회복이 네덜란드의 전후복구와 직결되어있다고 생각하도록 했다. 이처럼 네덜란드와 독일은 상호 정치적 압력을 주기에는 그 경제적 중요성이 너무 컸다.

전쟁의 막바지와 전쟁이 종식된 직후 네덜란드의 대독일 정책들은 전쟁 피해에 대한 보복과 보상 및 경제적 이해에 대한 고려로 이중적 입장을 띄었다. 네덜란드 내각은 독일을 향한 통일된 정책을 세우지 못했다. 그들을 독일을 체벌할지 또는 빠른 경제관계 정상화라는 도박을 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독일 영토의 일부를 합병하고 약탈당한 물품들을 반환하며 전후 복구를 위한 재건 비용 등을 독일에 청구하자는 강경한 입장이 있었다. 전쟁 직후 대다수 반독감정을 갖는 시민들에게 독일과의 무역을 재개하자는 제안은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따라서 연합군과 함께 최대한 빨리 네덜란드-독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서독 경제 재건에 협력하자는 온건한 입장이 공존했다. 하지만 양 지역에서 장기간 유지되어 온 높은 상호 경제의존의 수준을 회복하기에는 연합국의 전후 독일처리에 관한 정책방향이 모호했고 이는 네덜란드 전후재건에도 큰 제약으로 작용했

32) 이는 1951년 네덜란드 경제장관 Brink의 발언을 통해 재확인할 수 있다. 그는 “많은 네덜란드인들은 전쟁이 유럽을 완전히 바꾸어놓았기 때문에 네덜란드 경제 패턴 또한 바뀌어야하고 독일과의 전통적인 무역 관계 역시 대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그는 (네덜란드인들이) “삶은 멈추지 않고 유럽은 모든 부분이 적절한 수준으로 작동해야 건강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ak(2011), pp.165.

다. 독일은 연합군에 의해 4개 지역으로 나뉘어 관리 받고 있었고 당시 이 지역들은 경제체제가 부재했기에 가난과 난민들로 카오스의 상태였다. 연합군들의 각각의 통치지역은 자급자족지역으로 치부되어 독일 내 무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의 무역 또한 제한되었다. 유럽대륙은 독일의 기계, 부품과 공산품이 필요했지만 전후 모든 무역은 일시적으로 불가능했다. 독일은 또한 한 때 유럽의 식료품과 원자재의 가장 큰 소비국이었다. 독일의 회복 없이는 네덜란드와 같은 작은 개방형 경제의 회복은 불가능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대다수의 정치인들과 기업가를 포함한 산업계는 독일과의 경제관계 개선을 강조했고 실제 네덜란드의 대독일 정책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이 두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논란을 초래할만한 정책을 택하기에는 너무 강했다. 이와 동시에 1948년 미국정부의 독일에 대한 정책전환은 네덜란드 정부가 국내 경제회복을 우선으로 독일과의 경제관계 개선을 우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48년까지 영국과 미군 점령군은 네덜란드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독일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의 통치지역이 스스로 생존해나가기를 바랬고 그로 인해 독일과의 무역관계 회복을 원하는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럽국가들을 막았다. 두 점령지역이 합병되었을 때도 점령군들은 네덜란드 상품 수입에 관심이 없었다. 대부분이 고급 농산품이라는 이유로 독일 내 수요를 차단해버린 것이다. 나아가 연합군은 수입 물자에 대해서는 달러 지불을 요구했고 수출품에 대해서는 가치 없는 마르크화를 지불했다. 당시 독일은 교환불가능한 화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 정부가 자금의 대부분을 부담해야한다는 문제도 있었다. 점령군들이 경제전문가가 아닌 군사집단이었기에 독일 경제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했던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1948년 미국의 정책은 변경되었다. 독일의 미래에 대한 미국, 영국과 러시아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자 미국의 이해관계는 바뀌었다. 미국 정부는 서독 자치정부의 수립을 지지했고 마샬플랜과 화폐개혁안, 독일시장자유화를 실시했다. 이는 서독의 경제회복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독일 관계 정상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독일에 대한 정치적 견제는 유럽공동체라는 다자적 틀을 통해 완화될 수 있었다. 네덜란드-독일 간 관계정상화는 1949년 9월 미군이 네덜란드로부터 들어오는 독일 수입 규제를 풀면서 가능해졌다. 네덜란드 경제 회복은 마셜 플랜을 통해 달러부족의 문제를 일부 해소해주는 역할이 있었지만, 이 보다는 독일 시장 개방으로 더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즉, 네덜란드는 전후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전후 배상을 포함한 독일 문제를 해결해야했다. 종전 직후 연합국의 독일분할점령정책은 네덜란드와 독일의 무역관계 개선에 장애로 작용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한 상업적 고려가 다른 정치적 고려들보다 우선되어졌고, 연합국의 정책방향이 명확해진 후에야 네덜란드의 대독일 처리문제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다. 결국 전후 독일 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은 온건한 입장을 고수하던 정치인들과 산업계의 경제적 입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렴되어졌다.

이를 각각의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1국면 (1942-1943) : 네덜란드-독일 간 오랜 경제적 상호의존으로 여전히 교역상대국으로서의 독일 중요성 강조, 중립노선의 네덜란드가 독일의 침공을 예상하지 못했던 점, 전쟁 중반까지 네덜란드는 소극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도 원인.

- 제2국면 (1944-1945) : 대기근과 함께 항구침수라는 독일위협이 최고조된 시기로 전후 피해보상으로 독일영토병합 등 강경입장이 온건파 정치인들에게도 공감을 얻음.

- 제3국면 (1946-1949) : 전후 복구 과정에서 독일과의 무역개선이 보다 절실했던 시기.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 연합국의 모호한 대독일 전략이 네덜란드로 하여금 새로운 대안의 모색을 어렵게 함. 반독감정을 갖는 대다수 시민과는 대조적으로 정치인들과 주요기업인을 포함한 산업계가 서독 재건을 위한 온건한 전후 배상에 합의. 서독재건이라는 연합국의 결정에 의해 이는 더욱 명확해짐.

참고문헌

- 김영중, 장봉익. 『네덜란드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4).
- Barendregt, J. 1993. 'The Dutch Money Purge. 'The monetary consequences of German occupation and their redress after liberation, 1940-1952.
- Campen, S.I.P. 1958. 'The Quest for security. Some aspects of Netherlands foreign policy, 1945-1950.
- Central Bureau voor de Statistiek(CBS). 1970. Zeventig jaar statistiek in tijdreeksen, 1899-1969.
- Daalder. H. and J. H. Gaemers (eds.). 1996. W. Drees. Op de kentering. Toekomstbeschouwingen uit bezettingstijd.
- Economisch-Statistische Berichten (ESB). 1948. Herstelplan en herstelbetalingen
- Fitzmaurice, J. 1993. Belgium and Germany: An Enigmatic Relationship in Verheyen and Sø, The Germans and Their Neighbors.
- Gelissen, H. 1950. Bijdrage tot de Wederopbouw der Nederlands-Duitse betrekkingen; Beitrag zum Wiederaufbau der Deutsch-Niederlandischen Beziehungen.
- Griffiths, R.T. 1984. Economic reconstruction in the Netherlands and its international consequences, May 1945-March 1951.
- _____. 1990. The Netherlands and the integration of Europe 1945-1957.
- Groeneveld, G.W. 1947-1948. De economische en financiële betrekkingen tussen Nederland en Duitsland Maandschrift Economie. Tijdschrift voor algemeen economische, bedrijfseconomische en sociale vraagstukken 12 : 449-469.
- Gunther, F. Eyck. 1959. The Benelux Countries, An historical survey, Van Nostrand Company.
- Hirschman, A.O. 1945. National power and the structure of foreign trade. Berkeley HStAD, 1947. NW 397-202 Staatskanzlei; Brochure Vereniging van de Industrie en Handelkamers van het Land Nordrhein-Westfalen, 'De Nederlandsche Gebiedseisen' (1 September, 1947).

- HStAD, 1946. NW 397-197 Staatskanzlei; 'Memorandum' (5 December, 1946).
- Israel, J. and Reinier Salverda. 2002. Dutch Jewry, Its history and Secular Culture, 1500-2000, Brill.
- Kleffens, E.N. 1944. "If the Nazis Flood Holland", Foreign Affairs 22: 543-551.
- Lademacher, H. 1983. Die Niederlande und Deutschland 1945-1949: Wirtschaftsfragen und territoriale Korrekturen in W. Ehbrecht and H. Schilling, Niederlande und Nordwestdeutschland. Studien zur Regional- und Stadtgeschichte Nordwestkontinentaleuropas im Mittelalter und in der Neuzeit.
- Lak, M. 2008. "The Trust Company and its efforts to reconstruct the bilateral Dutch-German trade, 1945-1949." Paper presented at the 12th annual congress of the European Business History Association, Bergen, Norway (22 August, 2008)
- _____. 2011. "German-Dutch Relations after Occupation: Economic Inevitability and Political Acceptance, 1945-1957." PhD thesis,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 Lammers, K.C. 2006. "Introduction: The Nordic Countries and the German Question after 1945." Contemporary European History 15: 443-452.
- _____. 2006. "Living Next Door to Germany: Denmark and the German Problem." Contemporary European History 15: 453-472.
- LeCloannec, A.M. 1993. France, Germany, and the New Europe in D. Verheyen and C. So, The Germans and Their Neighbors.
- Leffler, M.P. 1999. "The Cold War: What Do 'We Now Know.'" American Historical Review 104 (2): 501-524.
- Lichtenauer, W.F. 1948. De havens in het Deltagebied van de Rijn in W.F. van Gunsteren and T. Lighthart, Physisch- en Economisch-Geografische Beschouwingen over de Rijn als Europese rivier.
- Londens Archief. 1942. 2.05.80, inv. nr. 2660; 'Lezing W. Chr. Posthumus Meyes' (26 October, 1942)

- _____. 1944. 2.05.80, inv. nr. 2610; G.J. Sas, 'Memorandum betreffende de militaire maatregelen van internationalen aard, welken, ter bevestiging van den vrede, met betrekking tot Duitschland na den wapenstilstand dienen te worden genomen' (31 August, 1944)
- Maas, P.F. (ed.). 1991. *Parlamentaire geschiedenis van Nederland na 1945*, Deel 3. Het kabinet-Drees-Van Schaik 1948-1951. Band A: Liberalisatie en sociale ordening.
- Mai, G. 2004. The United States in the Allied Control Council. From Dualism to Temporary Division in D. Junker (ed.),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in the Era of the Cold War, 1945-1990. A Handbook. Volume I: 1945-1968*.
- Nove, A. 1992. *An Economic History of the USSR 1917-1991*. London.
- Overy, R. 2007. *Russia's War*. London.
- Schaper, H.A. 1985. "Wij willen zelfs niet Möchen-Gladbach!." De annexatiekwesie 1945-1949', *Internationale Spectator* 39: 261-272.
- Weisz, C. H-D. Kreikamp en B. Steger. 1983. *Akten zur Vor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45-1949. Band 4 (Januar-Dezember 1948)*
- Wemelsfelder, J. 1954. Het herstel van de Duits-Nederlandse economische betrekkingen na de Tweede Wereldoorlog.
- Wielenga, F. 1996. Streep onder het verleden? Den Haag, Bonn en de "Generalbereinigung" van 1960/63', in F. Wielenga (ed.), *De Duitse buur. Visies uit Nederland, België en Denemarken 1945-1995*.
- <http://www.cpb.nl/nl/pub/cpbreksen/bijzonder/16/bijz16.pfd>. (검색일자: 2017. 7. 1.)

〈Abstract〉

The clearing of history between the Netherlands and Germany

Joo-Hyun Go^{*}

The clearing of history between the Netherlands and Germany through compensation of war damages was quite smooth. The Netherlands held a moderate position in negotiating the compensation and set narrower boundaries in defining damages compared to its neighboring countries. The Netherlands, a long-time neutral nation, had experienced serious damages to its industry due to German invasions. The percentage of Jews killed was also relatively high in the Netherlands. This paper focuses on the reasons why the compensation process between the Netherlands and Germany was so moderate despite its considerable damages. This can be explained in part by the establishment and participation in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but in doing so we may neglect the reason why the Netherlands, out of all countries that had damages, held such a moderate position.

Therefore, this paper looks beyond the functionalist and conclusive reason of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European integration, and instead focuses on analyzing what positions Hague took, what issues were at stake, how these positions changed, and why they did. Furthermore, I look at the structural (socio-economic) and actor (political) reasons for the moderate position ultimately taken by the Dutch Government. The Netherlands had to face the German problem amidst the chaos of the after-war years. Up to the start of World War II, Germany had been the Netherlands' biggest trading partner and the mutual dependence was higher than most trading partners. However, the division of Germany by the allies post-war

* 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Yonsei University

acted as a hindrance to the recovery of this treasured trading relationship. To overcome this, commercial interests was considered priority to political ones, and this strong position allowed consensus on the German issue. The many opinions regarding the matter was ultimately absorbed into those of the moderate politicians.

Key words: Dutch-German History Clearance, Post War German Problem, Territory Annexation, Dutch-German Economic Interdependence, Dutch-German Economic Relations

원고접수일: 2017. 8. 31.

심사마감일: 2017. 9. 10.

게재 확정일: 2017. 9. 11.